

황주홍 군수- 성윤환 의원

‘바가지 청자’ 진검승부

황 군수 “졸속국감” 발언에 성 의원 “사과하라”

검찰 수사 결과 따라 한쪽은 정치적 타격 심각

한나라당 성윤환 의원의 ‘강진군의 고려청자 바가지 매입 의혹’ 주장에 대해 황주홍 강진군수가 정면 대응에 나서 ‘청자 논란’이 국회의원과 자치 단체장의 갈등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현성 의원과 강진군의 주장이 침례하게 맞선 상황에서 겸찰의 ‘청자 고가매입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에 따라 어느 한 쪽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정치적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강진군은 22일 ‘성 의원은 강진군에 사과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성 의원 측이 의혹의 근거로 삼았던 고미술협회의 감정평가는 실물도 보지 않고, 사진(도록)으로만 감정한 것으로 마치 공신성이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해 강진군에 씻을 수 없는 굴욕감과 불명예를 덮어 써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은 “성 의원의 보좌관이



21일 황 군수에게 전화를 걸어와 같은 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황 군수는 말한 ‘성 의원의 국감 발언은 유감이다. 이는 졸속 국감의 전형이다’는 비판 내용을 문제 삼았다”며

“이 보좌관은 성 의원의 전갈이라며 강진군수가 공개적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밝혔다.

군은 또 “성 의원 측이 지난 19일 청자 재감정에 참여한 인사들의 짜맞추기 의혹을 제기했지만, 성 의원측이 추천한 특정 감정위원이 성 의원의 당초 청자 고가매입 주장을 뒷받침하는 평가액을 매긴 것은 짜맞추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성 의원측은 “군이 국민의 세금을 잘 못 쓴데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국고 환수에 나서도 시원찮을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사회적기업가 전문 교육

전남도는 22일 강진 다산수련원에서 사회적기업을 준비중인 잠재기업가 80여명을 대상으로 ‘전남 사회적기업 전문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성면 전남정무부지사의 특강과 사회적기업의 경영전략과 마케팅, 지역특화 및 성공모델 개발 전략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전남도 제공〉

지방공무원 채용 시험

2013년 본적제한 폐지

행정안전부는 오는 2013년부터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때 응시자격 가운데 거주지제한 요건의 하나인 ‘등록 기준지(옛 본적)’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서울을 제외한 15개 광역 시·도의 공무원 채용시험의 거주지 제한 요건은 해당 자치단체에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로 등록된 경우로 하고 있다.

그러나 등록기준지가 실제 거주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옮길 수 있어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거주한다는 ‘지역 연고성’ 개념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고려해 주민등록상 주소만으로 거주지 제한요건을 단일화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취소를 이유로 총사업비의 60%나 차감한 것은 정부의 사업추진 의지를 의심케 한다는 지적이다.

또 연구소의 2010년 운영비를 전액 삭감한 것은 사실상 광주세계 김치연구소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인 시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김재균 의원은 “정부의 예산삭감 조치는 김치연구소를 통해 광주에 김치클러스터가 조성되는 김치의 산업화를 앞당기고 지역경제에 기여하길 바라는 지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예산 팍 잘린 ‘광주 세계 김치연구소’

사업비 266억 삭감… 콘텐츠 개발비는 아예 없애

정부가 내년 12월 착공될 ‘광주 세계 김치연구소’의 총사업비와 운영비를 대폭·전액 삭감해 사업 차질이 우려된다.

민주당 김재균 의원(광주 북구)은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식품연구원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기획재정부 예산 심의에서 당초 정부가 계획한 세계김치 연구소 총사업비 450억원이 184억원으로 무려 266억원 삭감됐다”고 밝혔다.

또 김치연구소의 콘텐츠 개발과 사

업비 등 20억원이 전액 반영되지 않

아 세계 최고의 절임류 연구기관 육성이라는 당초 사업 취지를 의심받게 하고 있다.

정부는 총사업비 절감에 대해 당초 설립기로 한 시설물 가운데 전시·체험 공간을 기준에 있는 광주시 남구 김치종합센터로 대체함으로써 예산 절감이 단행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전시·체험동 건립

노동부, 전공노위원장 사법처리

공무원 단협 첫 국가형벌권 발동

조가 임용권에 개입할 수 있게 하고 유급 전임자를 인정하도록 하는 등 위법 사항을 담고 있어 지난 7월 시정을 명령했지만 두 지부는 시한 내에 이무くん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조법에 따르면 노동부는 단체협약에 위법한 내용이 있으면 노동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시정을 명령할 수 있고, 노사 당사자는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벌금 5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단체협약의 위법조항 때문에 노사 당사자가 사법처리되기는 이 처음으로, 국가가 노사관계의 자율성을 침해했다는 논란과 함께 노조의 반발 등 파장을 몰고 전망이다. 〈연합뉴스〉

국민 만평

- 김종두



그걸 지금 안 것도 심각한 문제요

광주·전남 어린이놀이터 ‘위험’

안전검사 합격률 각각 7.7%, 16.5% 그쳐

광주·전남지역 어린이놀이터의 안전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은 22일 전국 16개 시·도와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어린이 놀이시설(놀이터)에 대한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5만5천158개 놀이터 중 시설의 안전성 검사(설치검사)를 받아 합격한 곳은 9천862곳으로 17.9%에 불과했다.

광주의 경우 1천252개 놀이터 중 97곳만이 합격, 7.7%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특히 광주시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놀이시설 365곳 가운데서

치검사를 마친 시설은 21곳으로 5.8%에 그쳐,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유치원·초등학교 놀이터의 안전관리가 더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지역도 2천810곳 중 463곳(16.5%)만이 ‘설치검사’를 완료해 전국 평균을 밟았다.

당장 놀이기구의 보수 및 수리가 필요한 놀이터도 광주지역 24.3%(304곳), 전남지역 9.0%(254곳)였고, 15년 이상 장기 시설은 광주 5.1%(64곳), 전남 42.1%(1천183곳)나 됐다.

또 시설 담당자들의 안전의식도 미약했다.

전문기관에서 받아야 하는 안전교육 이수率이 광주 19.5%(244곳), 전남 22.2%(623곳)로 집계됐으며, 보험에 가입된 시설은 광주 33.1%(418곳), 전남 36.6%(1천28곳)에 불과했다.

유정현 의원은 “어린이 놀이터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주체와 감독관청의 관심 부족으로 안전검사, 안전교육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며 “안전관리제도 강화와 시설보수 비용 등 예산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숙기자 jwpark@kwangju.co.kr〉

광고접수안내

• (062) 227-9600
• FAX:(062) 227-9500

채권신고공고

본 회사는 2009. 10. 19. 입시주주총회에서 해산결의 되었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2009. 12. 22.까지 그 채권액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리며, 만일 위 기일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 서 제외됩니다.

2009년 10월 22일

에스엔에이치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서구 능성동 460-33
대표 청산인 남 재희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김영민(630308-1405617) 속에 대한 한정승인(채권자에 대한 공고, 죽고, 죽고)에 관한 민법 제103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 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 제외함.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제17000

공고인: 김은효, 김문경, 김애립
한정승인수리일: 2009. 10. 16.
공고기간: 2009. 10. 23 ~ 2009. 12.22(2개월)
연락처: 전남장성군 삼계면 삼도리 325
김은효(010-9355-1399)

광주광역시 공구 공고 제2009-790호

광주 개발재구역 관리계획(변경) 주민의견청취공고

광주 개발재구역 내 용당평수수 확장에 관한 관리계획(변경)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개발재구역의 의무 및 권리와 관련한 특별조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규정된 의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한다.”

시행일: 2009. 10. 23 ~ 2009. 11. 06(15일간)

다. 열람장소: 광주 도시개발본부(3층), 지원2동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 광주광역시 도시계획(062-613-4412),

· 상수도사업본부 시설(062-612-2553),

· 동구도시개발본부(062-610-2553 ~ 5),

· 지원2동(062-608-3663)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일지도판매(주)

한일지도 판매(주) ☎ 062-524-3059, 062-529-1409
(광주시 북구 운암동 477-2 운암주유소 뒤)

관리지역 세분화 신판지도 출시!!

이번에 새로나온책은 정부에서 시행한 시·군·전지역·관리지역 세분화 수록

**2010년 최신 광주광역시
지번도책 판매 중!**

이번에 새로나온 신판 지도책은

◎ 최신 광주, 장성, 담양, 곡성,
화순, 나주, 함평 지번도책 ◎

(주)한일지도판매(주)
전화: 062-524-3059
FAX: 062-529-1409

목포·무안·영암·신안군 4개 지역을 1권
으로 관리지역 세분화 되어나와 판매 중
입니다.

상담 문의 ☎ 062) 524-3059
☎ 062) 529-1409

홈컨 不動產 리서치

TEL: 062-233-2222 H.P: 010-3616-8698

태양광발전소 부지 급구함

■ 지역 : 전남·북, 기타지역

■ 용량 : 100KW이상~ 무제한

■ 조건 : 민원해결

개발행위허가

발전사업허가

완료된 곳

부동산 투자 클럽

T. 011-641-0925, (062) 515-4985

▶ 펜션부지(광주호상류-가든식당, 과수원, 임야)
34.830㎡ 매매가 3.3㎡당 12만원

▶ 대지(신촌동) 764㎡(버스승강장집, 전철역 5분거리)
매매가 3.3㎡당 36만원

▶ 고시릴(전대후문 체육공원 인근) 대 282㎡/건 560㎡
- (최근준공) 러52(층당 월임대료 23만원) 매매가 8억5천원

▶ 대지(복구 신안동) 1402㎡(물류창고최적)
매매가 3.3㎡당 150만원

▶ 삼가주택(오치동 대단지 아파트 입구)
- 대 496㎡/건 1487㎡ (6층건물) 매매가 17억

▶ 임야(남평읍 우산리) 16,811㎡(계획관리지역)
매매가 4억5천

▶ 농지(종효동-광주호상류) 1,927㎡